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for Social Welfare
Financing*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2013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예산은 정부 요구안보다 다소 증액된 342조원으로 이중 신정부의 복지 기초를 담고 있는 보건·복지·노동 부문이 97조 4천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28.5%)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기존 복지제도의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신정부의 복지공약 실천 등의 재원소요액이 5년간 131조4천억원(연평균 26조3천억원)으로 새누리당이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금년 경제전망이 3%대의 낮은 증가가 전망되고 있어 세수기반마저도 밝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재원의 확충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1.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 등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과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그리고 사회보험의 성숙 등으로 사회복지재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예산은 정부 요구안보다 다소 증액되었다. 확정 예산은 신정부의 복지기초를 담고 있는 관계로 보건·복지·노동부문이 97조 4천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28.5%)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정부 요구안보다 3천억원이 증액되었다. 이에 반해 일반공공지출 1조 5천억원, 국방 3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천억원이 감액

되었다.

앞으로 신정부의 복지공약 실천 등을 고려할 때 복지재정은 더 크게 증가하리라 본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약은 평생맞춤형 복지와 국가 책무 강화를 골자로 한다. 2013년 확정 예산에는 이미 대선공약 중 0~5세 무상보육 예산(1조2504억원)과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강화(615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588억원), 육아 서비스 개선(451억원),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395억원) 등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대선 공약에 따른 재원소요액은 5년간 131조4천억원(연평균 26조3천억원)으로 새누리당이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요 재원을 위해 구체적인 조달방안은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

조정, 세제개편, 복지행정 개혁, 그리고 기타 재정수입 증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급년도 경제전망도 3%대의 낮은 증가가 전망되고 있어 세수기반마저도 밝지 않은 상태이다. 새해 보건복지 예산은 100조원(보건·복지·노동 포함) 시대를 맞아 복지재원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재원 마련은 일반적으로 세원확대나 세수기반 확충, 재정운용의 효율성, 중앙과 지방의 분담구조 조정, 그리고 국가복지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들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복지재정의 현황과 신정부의 예산전망, 그리고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복지재정 현황

1)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추이

MB 정부 5년 동안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였다. 총지출을 기준으로 연평균 10.2%의 증가를 보이며, 내부거래와 기

금 보전지출을 제외하더라도 연평균 8.0%의 증가를 나타냈다.

지난 5년간 MB 정부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를 보인 것으로는 공적연금과 보육 및 가족, 노인·청소년으로 나타난다. 공적연금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탄생(2008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른 것이며, 보육부와 노인부문의 대표적인 의무지출 사업이다. 따라서 지난 MB 정부의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의 증가는 사회보험의 성숙과 의무지출의 증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에서 일반회계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었으나 기금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MB 정부 동안 일반회계의 연평균증가율이 8.5%이나 기금은 연평균 14.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2) 2013년도 정부 예산 요구안 VS 확정안 비교

2013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예산은 정부 요구안보다 증액되었다.

표 1.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08~12)
총지출	248,863	296,367	312,254	335,694	366,928	10.2
순지출 ¹⁾	163,033	197,100	195,855	206,922	221,815	8.0

주: 확정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1) 총지출에서 내부거래와 기금 보전지출을 제외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 개요, 각년도.

표 2.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 사업별 추이(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08-12)
계	16,303,308	19,709,983	19,585,487	20,692,179	22,181,475	8.0
기초생활보장	7,264,372	7,973,099	7,297,260	7,516,784	7,902,802	2.1
취약계층지원	818,928	962,540	932,448	1,046,026	1,182,957	9.6
공적연금	50	280	395	387	1,004	111.7
보육·가족	1,583,417	1,838,316	2,207,461	2,510,736	3,065,226	18.0
노인·청소년	2,121,581	3,161,673	3,505,189	3,714,510	3,899,279	16.4
사회복지일반	365,201	632,483	444,895	526,929	558,265	11.2
보건의료	619,837	963,872	878,288	729,665	623,718	0.2
건강보험	3,529,922	4,177,720	4,319,551	4,647,142	4,948,224	8.8

주: 2008~2012는 확정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 개요, 각년도.

표 3.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 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08-12)
계	248,863	296,367	312,254	335,694	366,928	10.2
일반회계	158,548	192,706	192,917	204,952	219,745	8.5
특별회계 ¹⁾	4,485	4,394	2,938	1,970	2,070	-17.6
기금 ²⁾	85,830	99,267	116,399	128,772	145,113	14.0

주: 2008~2012는 확정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포함됨.
 2)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청소년육성기금(2008~2010)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 개요, 각년도.

특히 확정 예산이 “박근혜 예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정부의 복지기조를 담고 있는 관계로 2013년 정부 예산 요구안과 확정안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3년 확정 예산의 자원배분을 살펴보면, 정부 총 지출 342조원 중 보건·복지·노동 부문이 97조 4천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28.5%)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공공행정 55조 8천억원(16.3%), 교육 49조 8천억원(14.6%), 사회간접자본 24조 3천억원(7.1%)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3년 정부 요구안과 비교했을 때 교육부문이 7천억원 증액되었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지방재정지원에 각각 4천억원씩 증액되었으며, 보건·복지·노동부문은 3천억원 증

액되었다. 이에 반해 일반공공지출 1조 5천억원, 국방 3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천억원, 감액되었다¹⁾.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총지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 확정안은 요구안에 비해 2,332억원 증가하였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내부거래와 기금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지출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는 5,355억원 증가(1.7%)한 반면 보건분야는 3,023억원(△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별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육부문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7,295억원, 21.2%), 취약계층지원(642억원, 4.9%)과 노인부문(289억원, 0.7%) 역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기초생활보장부문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2,880억원, △3.3%).

2013년 보건복지부 확정 예산안이 정부 요구안과 다른 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0~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0~2세에게 지원되는 보육료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소득하위 70%에만 지급하는 양육수당도 전 계층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육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등이 반영되었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 공약, “0~5살 무상보육”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확대,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등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족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 가족의 역할을 강화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대되었다. 셋째,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130만원 이하 계층의 사회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되었다. 현재까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월 소득

표 4. 2013년도 예산 요구안과 최종예산의 자원배분 비교

(단위: 조원)

구분	보건 복지 노동	일반 공공 행정	교육	국방	SOC	농림 수산 식품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공공 질서 안전	환경	문화 체육 관광	외교 통일	지방 재정 지원	계 ^{*)}
최종예산	97.4	55.8	49.8	34.3	24.3	18.4	16.9	15.5	15.0	6.3	5.0	4.1	1.7	342.0
정부요구	97.1	57.3	49.1	34.6	23.9	18.3	16.9	15.7	15.0	6.3	4.8	4.1	1.3	342.5
차이	0.3	△1.5	0.7	△0.3	0.4	0.1	0	△0.2	0	0	0.2	0	0.4	

주: 분야별 총합이 총지출과 같지 않음(예, R&D 예산이 각 분야 예산에 중복 집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 예산 주요내용”, 2012년 12월 31일 재구성

1) 동아일보, 안보-성장 예산 깎아 복지 100조원 시대, 2013년 1월 2일.

11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서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월소득 130만원 이하는 1/3을 국가가 부담해왔다. 넷째, 최종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 시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을 정부 요구안(3,214억원)에서 615억원 증액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하루 6시간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시간은 12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²⁾.

이와 함께 2013년 확정예산에는 ‘부대의견’

항목이 34건이나 달랐다. 부대의견은 정부부처가 실제 사업을 집행할 때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 지침을 주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명분을 준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증액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선 공약 중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부대의견에 덧붙여 부처를 압박하는 것이다³⁾. 이 중 2건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의 경우 국고

표 5. 2013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요구안과 확정안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2013 요구안	2013 확정	증감	증가율
총지출		408,341	410,673	2,332	0.6
회계별	예산	251,727	254,056	2,329	0.9
	일반회계	249,453	251,762	2,309	0.9
	특별회계	2,274	2,294	20	0.9
	기금	156,614	156,617	3	0.0
	건강증진기금	18,978	19,008	30	0.2
	국민연금기금	135,534	135,534	0	0.0
	응급의료기금	2,102	2,075	△27	△1.3
분야별	사회복지	320,850	326,205	5,355	1.6
	기초생활보장	88,411	85,531	△2,880	△3.4
	취약계층지원	13,185	13,827	642	4.6
	공적연금	135,539	135,539	0	0.0
	보육·가족	34,483	41,778	7,295	17.5
	노인·청소년	42,642	42,931	289	0.7
	사회복지일반	6,589	6,598	9	0.1
	보건	87,491	84,468	△3,023	△3.6
	보건의료	18,971	19,337	366	1.9
	건강보험	68,520	65,131	△3,389	△5.2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41조673억원으로 최종 확정”(2013년 1월 1일자)

2) 한겨레, 무상보육 확대·반값 등록금 증액 등 공약 뒷받침-박근혜 예산 2조4216억원 반영, 2012년 1월 2일.

3) 동아일보, 안보-성장 예산 깎아 복지 100조원 시대, 2013년 1월 2일.

와 지방비의 매칭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는데,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자 2013년에 한해서 지방비 부담분 중 일부인 5,607억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 중 3,607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00억원을 분담하여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사업에 대하여 2013년에 한하여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292억9,100만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2억 9,100만원씩 분담하여 지원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⁴⁾.

3. 신정부 보건복지 예산 전망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약은 평생맞춤형 복지와 국가 책무 강화를 골자로 한다. 또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2013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공약들도 있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공약들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는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들을 복지부 예산개요 구분에 따라 재정리한 것이다.

표 6. 새누리당 대선 공약 요약

구분		새누리당 공약
사회 복지	기초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조정, 재산의 소득 환산제 개선 •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 확대, 기초공제액 수준과 유형별 재산의 소득환산을 개선 •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급제 개선을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 장애인 이동권 보장(콜택시, 저상버스 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 • 장애인 건강권 보장(재활프로그램 확충, 만성질환 대비 장애인 운동 활성화,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 재활중심 거점보건소 확충사업, 의료비 이행급여제 적용, 정신보건사업 지원)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월급여 125만원 기준 일부 지원→ 월급여 130만원 기준 전액 지원)
	보육·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맞춤형 보육시스템, 0~5세 보육 및 교육 완전 무상) • 임신과 출산 국가 부담 확대(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확대, 저소득 가구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확대, 난임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만 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고위험 임신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 고위험 임신부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표 6〉 계속

구분		새누리당 공약
사회 복지	보육·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아이돌봄서비스를 기본형, 종합형,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각화,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만 2세까지 확대(단, 취업모, 다자녀, 장애부모로 한정), 시간제 돌봄서비스 시설이용과 미이용, 미취업모 자녀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 나홀로 아동 및 방치아동 등에 대한 무료 아이돌봄비 파견 사업 실시 및 농산어촌 등 우선돌봄제공
	노인·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도입 •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사회복지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보건	보건의료 건강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주: 보건복지분야 정책공약 중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은 제외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만 정리.
 자료: 새누리당(2012),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에 따른 재원소요를 5년간 131조4천억원(연평균 26조3천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복지공약을 총괄한 ‘편안한 삶’과 관련하여 총 28조3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그 뒤를 이어 여성 23조5천억원, 교육 18조8천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재원소요를 위해 5년간 134.5조원을 조달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조달방안은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 조정(71조원), 세제개편(48조원), 복지행정 개혁(10조6천억원), 기타 재정수입 증대(5조원)이다. 즉 세출절감을 통해 81.5조원을 확보하고, 세입 증대를 통해 53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5년간 총 134조5천억원(연평균 27.0조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중 0~5세 무상보육 예산(1조2504억원)과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강화(615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588억원), 육아 서비스 개선(451억원),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395억원) 등이 이미 2013년 확정 예산에 반영되었다. 또한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 소요분과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사업 등이 부대의견에 제시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3,900억원이 2013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될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내부거래와 기금 보전지출을 제외하고 약 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복지재원 확충 과제

새해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맞았다.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높으며(28.5%), 금액 또한 역대 최고로 높은 만큼 이에 걸 맞는 복지재원의 확충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재원 마련은 일반적으로 세원확대나 세수기반 확충, 재정운용의 효율성, 그리고 다원화된 지방교부세재원을 통합하고 제도적으로 복지재원을 보장하는 사회복지교부금 도입을 들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첫째, 세원확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재원마련이다. 복지지출의 절대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세율의 인상이나 세목의 신설과 같이 직접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방식이다. 예로서 소득세의 적용대상자 확대나 세율의 인상, 이자·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2012년 1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억원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을 38%로 설정하였으나 대상자가 전체 소득자의 0.16%(약 3만 1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적용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낮추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보이다. 지하경제 규모는 개념과 측정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다. 우리의 지하경제규모를

새누리당은 GDP의 24% 수준인 372조원, 현대경제연구원은 200조원, 그리고 조세연구원은 167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이 GDP의 약 10% 안팎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과표양성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가 최소 200조원 규모가 존재함에 따라 연간 20조원 이상의 세금탈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정리하여 세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시장실패로 인해 투자가 부진한 분야로 제한하고 일몰규정을 도입하여 다양한 특례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감면제도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과 사회보장사업을 통한 재정지출 효과를 상호비교 하여 조세·재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나아가 감면조항의 축소 및 폐지는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지만 이해집단의 반발로 인해 정치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이다.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경우 이들의 통합·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최근 국회 결산심사 결과 유사중복에 따른 시정요구 사업 수는 2011년 35건, 2012년 31건으로 매년 다수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산규모는 2011년도 5,300억원, 2012년도는 6,678억원으로 크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유사 사업의 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 절감을 가져 올 수 있다.

넷째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원화된 지방교부세재원을 통합하고 제도적으로 복지재원을 보장하는 사회복지교부금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원이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로 다원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권교부세의 운영도 내년 말이면 만료된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일반 재원으로 배분되어 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지방 복지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간 복지격차를 해소

하기위해 지방교부세 중 복지분야에 배분되는 예산액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교부금으로 단일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교부금 도입은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자체의 적극적 복지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칸막이식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다소 위축될 수 있어 선도입 후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교부금이 내국세에 고정 연동되어 있어 지출증가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분담비율이 매년 일정 수준이상 되도록 법제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보건
복지